■ 공원 탐방 ④ 중앙공원 下 개발·보존 논란

광주시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녹지인 서구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공원이용자,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시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중앙공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에서 '개발'과 '보존' 논란이 부각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중앙공원이 있었다. 도심 내 넓은 녹지는 그 가치만큼이나 이용 방안에 대한 의견 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녹지의 가치를 좀 더 보존하는 쪽을, 광주시나 민간업체들은 녹지의 가치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쪽에 기울어있다.

지난 2005년 광주시가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을 지으려다가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물러선 것이나, 4년 뒤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을 계획했다가 역시 뜻을 접었던 것도 이 같은 의견 차가 배경이었다.

녹지가치 제대로 살리게 조성계획 다시 세우자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인공위성 사진.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체계 구축해야**=광주시가 특급호텔 추진에 나설 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건립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추진했던 지난해 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민자 1천86억원 등 1천200억원을 들여 10만㎡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도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광주시는 이를 청소년수련시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유스호스텔 등 환경단체 반발로 백지화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심 내 중요자연자원의 개발·보존에 대한 투명한 논의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녹지 보존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들과 사전 논의 없이 개발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도시계획전공)는 "도시 내 자연자원의 이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과정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가나 시민단체, 행정이 초기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사업구상 단계부터 참여한다면, 나중에 마찰이나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특정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중앙공원을 현재 상태로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광주시가 센트럴파크인 중앙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무조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년 전 수립한 조성계획 재수립 필요**=지난해 말 광주 9개 단체로 구성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 중앙공원 인근 주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공원조성계획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이 지난 1992년 수립된 점을 감안할 때 재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의 사유지 매입 계획, 공원 내 각종 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계획 마련 및 그에 따른 추진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18년전 개발계획 현실 반영 못해

현재의 조성계획에 따르면 중앙공원은 유희시설지구로 광장, 전망휴게소, 수변휴게소, 유희시설지, 식당 및 매점,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 서구청과 광주시는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공원 내 풍암저수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구름다리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내 녹지, 공원 내와 주변 주거지와의 연계길, 사유지와 공유지 분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어떻게 보존 또는 개발할 지 여부, 인공시설물과 자연자원의 배치 방안, 추후 개발 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대 조동범 교수(조경학 전공)는 "중앙공원은 주변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공원으로, 주변과의 녹지연계나 도시생태 형성을 위한 모색 없이 만들어졌다"며 "도시와 건축을 위한 장식의 공간이나 표피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자연 인프라로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광주시와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달 3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2010년 제1회 1등 광주 연·관포럼'을 가졌다.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영국도시건축연구소 소속 양도식 박사가 강사로 나서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의 과제와 전략'을 발표했다.

양 박사는 도시계획의 종주국인 영국이 문화와 공간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다며 영국의 중소도시인 브리스틀, 버밍엄, 쉐필드,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물리적인 용기로서의 공간이 사회·문화현상을 담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물리적 장소에 문화콘텐츠를 투영함으로써 성공적인 문화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영국 도시재생정책은 주택과 공공보건-슬럼 제거-도시재건설-도시재정비-도시재개발-도시재생-도시부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인구 100만명으로 영국 두 번째 도시인 버밍엄은 18세기부터 전형적인 산업도시로, 1970년대부터 급격히 도심이 쇠퇴했으며, 한 때 실업률이 29%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버밍엄은 도심 전체 문맥에서 양질의 공공공간과 다양한

광주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도심에 문화콘텐츠 입히자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영국 버밍엄시의 시가지.

건축 디자인을 통해 장소성을 창출했으며, 기존도심과의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성과 연결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리스틀은 인구 40만의 영국 6번째 도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직접 확보하고, 장기적인 도심재개발 전략을 수립하며 동시에 각 자치구 도시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의 핵심으로는 문화와 예술 관련 비즈니스를 선택했다.

맨체스터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이 명확한 비전과 개발 골격을 제시하고,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주요 현안으로 했다. 쉐필드는 민간 도시재생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단기사업(2~5년), 중기사업(6~10년), 장기사업(10~15년) 등을 정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뉴캐슬은 문화 랜드마크와 공공공간을 통해 도심재생에 성공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양 박사는 광주시의 문화주도적인 도시재생전략으로 ▲광주시 등 공공이 명확한 비전제시 ▲중앙정부와 광주시, 민간, 시민단체 등의 조율을 통한 갈등 해소 ▲장기적·단계적·유동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 ▲도시디자인 주도 정책 수립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